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하라!

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회에 제안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보장 촉구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부산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구성과 예산 수립·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의회사무국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 독자적인 예산 활용, 의회조직 구성의 자율권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4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지방의

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문창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완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발송했다.

문창무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조현경_hkcho@korea.kr

[화제의 조례]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미술관·박물관·공원 ... 관리 효율성 높여 관광도시 위상 강화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의 운영관리를 평가 분석해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공영관광지란 지자체나 공사·공단인 운영·관리하는 관광지를 말한다. 공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시 또는 구·군이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하는 관광지·박물관·미술관 △부산시장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민간이 관리하는 관광지·박물관·미술관 등을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시·구·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설은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복천



부산시의회가 부산 대표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공영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를 달리는 다누비열차).

박물관, 정관박물관, 해양자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 임시수도기념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총렬사, 해운대해수욕장, 아미산전망대, 이기대, 달맞이언덕, 동백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관광 시설은 부산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중앙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광복기념관, 누리마루APEC하우스, 영화의전당 등이다.

조례는 공영관광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부산시가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공영관광지의 평가를 위해 '공영관광지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도 담았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 지표도 개발하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공영관광지를 방문해보면, 시설이 낡아서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는 항상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밀려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운영·관리 및 평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과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